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요 언론사
보도의 프레임 유형에 관한 연구
- 주요 일간지 논설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난 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요 언론사 보도의 프레임 유형에 관한 연구

- 주요 일간지 논설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임도빈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이 난 샘

이난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원장 김 현 섭 (인)

부위원장 권 혁 주 (인)

위원 임 도 빈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사 사설 기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여 참사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귀납적으로 확인하고, 언론사별, 언론사의 성향별, 국정조사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2023년 2월 9일까지 약 100일간 보도된 6개 언론사(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사설 기사를 수집하여 연구대상 144개의 사설 기사를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주제함수별로 37개의 주제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3가지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이야기 구조로 재구성하여 최종 언론 프레임으로 도출하였다.

프레임1은 ‘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 프레임이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프레임의 내용이다.

프레임2는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 프레임이다. 정부는 참사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였으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여당도 동참함이 마땅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프레임3은 ‘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 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프레임이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윗선 무혐의’로 끝났고, 어렵게 시작된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없이 기간을 마쳤으며, 해임건의안 역시 대통령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위에서 도출한 프레임을 토대로 언론사별 프레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나, 3가지 프레임 모두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언론사 성향별 프레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연구결과를 시행한 결과, 프레임1에서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진보 성향

언론사보다 해당 프레임을 2배 정도 더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2에서는 보수 정권과 다른 정파성을 가진 진보 언론에서 해당 프레임을 3배 이상 더 활용하였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언론의 정파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레임3은 포괄적 프레임으로 진보언론이 조금 더 언급하였으나 앞선 프레임1과 프레임2에 비해 비교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조사 전후로 프레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프레임1은 수사 초기에 정부의 부실대응과 무너진 보고체계가 드러나며 부각된 제도개선 프레임으로 국정조사 전에 주로 언급되었다. 프레임2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프레임으로 국정조사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빈도가 급감하여 국정조사 전의 빈도가 높았다. 프레임3은 포괄적 프레임이긴 하나 대부분의 주제진술문이 국정조사 이후에 나타난 이슈들이므로 국정조사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귀납적 언론 프레임 연구이다. 후속 프레임 연구시 본 논문이 하나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군집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덴드로그램을 통해 최적 군집수를 도출한 후, cluster plot(군집구성) 분석을 통해 군집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K-means 군집분석 등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에 포함된 주제진술문을 확정하였다. 향후 언론 프레임 연구시 방법론으로 참고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이태원 참사, 언론 프레임, 귀납적 프레임 분석

학 번 : 2022-29042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7
제 1 절 이론적 배경	7
1. 사회재난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7
2.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과 프레임 효과	10
3. 언론의 이념성과 보도양태	12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14
1. 재난 및 사고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14
2. 미디어 프레이밍 관련 선행연구	19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6
제 1 절 연구문제	26
제 2 절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27
2. 자료수집 방법	28
3. 연구방법	28
제 4 장 분석 결과	33
제 1 절 이태원 참사 경과 : 언론사 사설을 중심으로	33
1. 프레임 제시 전 보도 경과 연구 필요성	33
2. 이태원 참사 보도의 주요 흐름	33
제 2 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프레임	37
제 3 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프레임 차이	50
1. 언론사별 차이	50

2. 언론사의 성향별 차이	51
3. 기간별(국정조사 전후) 차이	53
제 5 장 결론	54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54
1. 연구결과	55
2. 시사점	57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2

표 목 차

[표 1]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 논란	2
[표 2]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 이후 논란	3
[표 3] 피터 샌드만의 위험 위해-분노 모델	9
[표 4] 프레임에 대한 다양한 정의	10
[표 5] 갈등구조와 보도관행	17
[표 6]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21
[표 7] 코로나19 확산 시기 중국 관련 사설 프레임	21
[표 8] 언론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24
[표 9] 이태원 참사 보도의 주요 흐름	36
[표 10]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사 사설에 나타난 주제함수와 주제진술문	39
[표 11] 군집별 주제진술문	43
[표 12]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귀납적 언론 프레임	45
[표 13] 언론사별 주제진술문 등장 빈도	48
[표 14] 언론사별 프레임 평균	50
[표 15] 언론사 성향에 따른 차이 검정	51
[표 16] 국정조사 전후 차이 검정	53

그림 목 차

[그림 1] 이태원 참사 관련 보수-진보언론 사설 비교	4
[그림 2]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41
[그림 3] 군집분석 : cluster plot) 그래프	42
[그림 4] 군집분석 : variables-PCA 그래프	43
[그림 5] 각 프레임의 언론사 사설에 등장한 비율	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 좁은 골목길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왔던 시민들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사망 156명, 부상 157명)가 발생하였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참사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502명 사망) 이후 처음이며,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299명 사망) 이후 국내 최대 인명사고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시행(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하였고, 2022년 핼러윈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치러지는 첫 핼러윈 축제였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당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 기준 13만 131명)가 운집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시청)나 용산구(용산구청)에서는 현장 관리나 인원 통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 병력 역시 137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마약범죄나 불법촬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동원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단 58명뿐이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2년 10월 30일에 정부는 2022년 11월5일 밤 자정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발생지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국가 애도기간 선포의 정당성, 정부 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 글자 없는 검은 리본 지침 등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산구청장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정부의 책임회피

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더욱 논란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 논란

구 분	내 용
현장 관련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압사 유발자 존재 의혹
	여성 피해자 CPR 주저 루머
정부의 대응	국가 애도기간 선포 정당성, 강제 추모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지원금 형평성
	정부의 ‘사고’, ‘사망자’ 등 용어 지침
	글자 없는 검은 리본 지침
	행정안전부 장관 면피성 발언
	용산구청장 발언
인터넷 및 SNS	피해자 2차 가해 (피해자 조롱·비난 게시물/댓글, 사고영상 무분별 유포)

위 <표 1>에서 나타난 참사 발생 직후의 논란은 이후 경찰이 특별수사 본부를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면서 잦아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 측에 책임이 있는 이런 대형 참사에 경찰 스스로 수사 주체가 됨으로써 ‘셀프수사’ 논란이 처음부터 끊이지 않았고, 중간중간 추가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막말과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나온 부적절한 국무총리의 발언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참다못한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자 국민의힘 정당의 한 국회의원은 ‘세월호’와 ‘횡령’ 운운하며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여 참사 유가족들은 물론 세월호 피해자의 상처까지 다시 아프게 하였다. 이렇게 국가 재난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리어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격려를 하고 일관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여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분노를 일으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논란은 다음과 같다.

<표 2> 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 이후 논란

구 분	내 용
수사 관련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
	경찰에게만 책임 집중 수사 논란
정부측 대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막말과 거짓말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농담과 피해자 책임전가 발언
	시민추모체에 정부/국민의힘 인사 전원 불참
국회의 대응	서울시에서 유가족 합동분향소 행정대집행 추진
	민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 및 국민의힘 반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국민의힘 의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전원 사퇴
	대통령의 해임결의안 수용 거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유가족	국민의힘 의원 유가족 협의회에 막말
	유가족 협의회 구성하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시민단체	유가족 동의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

이렇게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며,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참사 발생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행위주체(정부/국회/국민)들의 다양한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며 언론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 또한 변화하였다. 이렇게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바뀌는 논란과 이슈 상황 속에서 언론이 어떤 틀로 보도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복잡한 현상을 국민들은 언론들이 보도하는 틀로 짧은 시간 안에 간단히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특정 관점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특유의 관점을 가진 언론매체의 보도는 수용자인 국민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

게 되기 때문이다(이준용, 2005). 특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은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은 보도의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결과로 드러났다. 이러한 언론의 정파적 보도 경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을 대표하고, 한겨레신문-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종혁, 2022).

실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서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보도 양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일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을 살펴보자.

<그림 1> 이태원 참사 관련 보수-진보언론 사설 비교



위 그림을 보면,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한겨레신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하여 “이상민 해임안은 국민 뜻, 윤 대통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을 통하여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이 정당한 요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보수이념을 대표하는 조선일보는 “李 장관 문제 있지만, 野 국회권력 남용 심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며 오히려 야당이 국회 권력을 남용하여 정략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여전히 언론의 정파적 지형도가 이태원 참사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사 사설기사에서 그동안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온 국내 진보/보수/중도 매체가 실제로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여 보도하고 있고, 이러한 프레임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를 전후로 프레임의 활용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양상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언론의 프레임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이태원 참사’ 관련 프레임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2023년 2월 9일까지 약 100일간 쏟아진 6개 언론사의 사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언론사의 사설은 사안의 원인과 배경, 해결책을 풀이하고 신문사의 주장이 담기게 되므로,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의 사설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연구 방법은 이준웅(1997)의 프레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기간에 쏟아진 신문사의 사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설을 제외한다. 그 후 뉴스 프레임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하므로 확정된 사설 기사 전체를 읽어가면서 주제함수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주제함수를 토대로 각 주제함수에 해당되는 주제진술문을 선정하게 된다. 그 다음 각각

의 사설기사가 수집된 주제진술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외에 2명의 코더를 참여시키고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코딩작업을 위해 사설 기사를 세로에 배치하고, 가로에 주제진술문을 배치한 행렬표를 만들어 주제진술문의 등장 빈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군집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에 포함된 주제진술문을 재구성하여 의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언론 프레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프레임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태원 참사’ 보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언론사별, 언론사 성향별(보수/진보) 및 시기별(국정조사 전후)로 프레임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재난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해상 사고 포함),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및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다.¹⁾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k Society), 1986> 라는 책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한다. 현대문명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예로 들면, 우리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지만 대다수의 가정이 자가용 자동

1) 사회재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관련 법률에서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차를 갖게 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였고 일상화 되었다. 즉, 자동차의 발명이 인간의 편의를 증진시켰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소가 발생하였고, 이 새로운 위험요소의 특징은 예외적 위험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 그는 이렇게 사회가 제공하는 일상적 위험을 구성원 각자가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립된 개인이 문명화된 위험사회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위험사회 이론과 재난안전법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는 사회재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²⁾ 현대 문명으로 둘러싸인 일상적인 공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면서, 실제 그런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나 지자체도, 긴급히 구조작업을 해야 했던 경찰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모든 위험은 피해자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참사는 울리히 벡이 주장했던 위험사회의 문제가 한국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여겨진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공해,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 문제를 전문가가 독점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실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피터 샌드만(Peter Sandman)의 위험 위해-분노 모델(Hazard-Outrage Model)이다(Walaski, 2011). 이 모델은 ‘위험 = 위해 + 분노’라는 모형의 간결성과 함께 객관적인 위해와 주관적인 공중의 인식을 결합한 통합적 프레임을 제시하여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 이론의 첫 번째 유형은 높은 위해와 낮은 분노의 상황이다. 이 때는 ‘위험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낮은 위해와 높은 분노의 위험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략이다. 이런 경우 위험 전문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잘못된

2) 정부는 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적용하여 용산구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커뮤니케이션에 임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위해의 수준도 높고 분노의 수준도 높은 최악의 위험상황으로 비상사태 혹은 대규모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위해와 낮은 수준의 분노를 가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일상적인 위험상황으로 평소에 진실하고 개방적인 정보의 유통을 이어가며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 3> 피터 샌드만의 위험 위해-분노 모델(Hazard-Outrage Model)

구 분	위해수준 - LOW	위해수준 - HIGH
분노수준 - LOW	진실하고 개방적 메시지, 평소 신뢰 구축	위험 경고 메시지
분노수준 - HIGH	분노 관리 메시지	함께 난관 극복 메시지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 위 모델을 적용하면, 우선 평소에 윤석열 정부는 진실하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실패하였다. 위험 관리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대통령 본인의 신뢰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³⁾ 또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부 장관과 용산구청장의 면피성 발언으로 ‘함께 난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와는 상반되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전파하였다. 총체적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재난 발생시 위험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정보 흐름은 직접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매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언론이 주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

3) [신뢰도 조사]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시사IN, 2022.9.12.)

고 있기 때문에(김원제, 2003),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언론사가 구성한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고, 언론사별로 이념 성향이 지배하는 현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미디어 프레임 이론과 프레임 효과

미디어 프레임(Framing)은 뉴스 미디어가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할 때 특정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 이론(Framing Theory)은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의 프레임 분석에서 주창된 이론으로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틀이 달라 자신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적용한 것이 미디어 프레임(Media Framing)이며, 이 이론은 뉴스 미디어가 사용하는 프레임에 의해 수용자들의 뉴스 해석과 시민사회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프레임 이론은 뉴스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준거틀인 프레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표 4> 프레임에 대한 다양한 정의

학 자	정 의
고프만 (Goffman, 1974)	수용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올바르게 지각 또는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
터크만 (Tuchman, 1978)	언론사들이 뉴스 제작과정에서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하는 현실
기틀린 (Gitlin, 1980)	현실에 대한 해석과 선택, 강조, 배제, 축소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을 유의미하게 재해석하는 것
엔트만 (Entman, 1993)	언론이 현실의 특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현저하게 강조함으로써 수용자들의 해석과 평가를 유도하는 것

흔히 프레임은 사진을 찍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사진작가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예로 들어보자. 우선 사진작가는 가장 좋은 피사체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피사체를 탐색해서 발견한 사진작가는 이번에는 좋은 구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것이다. 피사체에서 강조하고 싶은 장면은 클로즈업 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카메라 앵글 바깥으로 빼거나, 들어오더라도 아웃포커싱 처리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진작가는 원하는 사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진작가는 한정된 시간과 자본으로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피사체를 선별하고, 강조대상을 부각시키고,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프레임에서 제외시키거나 흐리게 처리를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은 언론이 사용하는 프레임 전략과 일치한다. 선택(Selection), 강조(Salience), 무시(Ignorance)가 흔히 알려진 뉴스 미디어의 프레임 전략이다. 즉, 뉴스 미디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매체가 아니며, 현실의 일부분을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강조해서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사건의 특정한 측면은 무시되어 노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언론사의 프레임에 따라 구성된 뉴스는 끊임없이 사회현상을 정의하고 해석하며 대체해 나간다. 이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수용자의 현실 인식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코로나19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상반되는 사실을 지면을 통해 보도하였는데,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중국 불신 프레임’을 다뤘고, 한겨레신문은 ‘중국과의 협력강화 프레임’을 고수하였다(고동완, 이창현, 2022). 이는 뉴스 미디어를 수용하는 수용자가 특정한 프레임을 고수하는 뉴스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현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언론의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이 뉴스의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프레임 효과라고 한다(이준웅, 2005). 이준웅(2001)은 또 뉴스의 내용과 중요성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뉴스

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인 프레임 자체가 뉴스에 대한 해석과 의견에 중요한 효과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준웅(2001)은 같은 논문에서 신문고시에 대한 같은 내용의 뉴스를 접한 뉴스 수용자라 할지라도 제시된 뉴스 프레임이 다르면, 그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언론의 이념성과 보도양태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작성하는 기사는 진실성(truthfulness)과 객관성을 기본으로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균형성(balance)을 지향해야 한다(김영옥, 2011).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사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프레임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독자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쳐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처럼 언론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언론들 중 신문사들의 이념성향은 보수와 진보라는 명확한 구분점을 가지고 다루어져왔다. 우리나라 신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쪽 언론사이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보를 대표하는 언론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송용희, 2005; 최현주, 2010). 그동안 선행연구들의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종합하면, 보수주의는 사회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진보주의는 진보사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언론사에서 나타나는 이념성은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을 보이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병행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당 정파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김영옥·임유진, 2009). 한국 언론이 가지는 정파성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강명구 2004; 이재경, 2004), 미디어 기업과 그 소유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론의 정파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McChesney, 2009). 언론의

정파성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파적인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 발생한다. 지속적으로 편파 보도를 접한 독자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Schutz, 1976), 오히려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소통의 위기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지원·김영옥(2001)은 우리나라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편향이나 경제적 손익에 따라 다른 보도 양태를 보여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면에 외국 언론은 정파성을 보이기 는 하지만 국내 언론에 비해서 훨씬 경미하게 나타났고,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면, ‘이태원 참사’는 정부에 의해서 국가 애도기간이 설정되고, 재난안전법 상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용산구가 선포되는 등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위해가 크고, 국민들의 분노 역시 큰 상황에 적합한 대응이 되지 못하였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정부와 전문가, 국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언론의 뉴스 프레이밍 이론과 프레임 효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언론이 구성한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들인 국민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언론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여 각 언론사가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면서 나타내는 프레임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로 언론사들이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념성향별로 어떤 프레임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분석

1. 재난 및 사고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재난의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재난은 주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이었고, 정부도 풍수해 중심의 재난관리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및 ‘삼풍백화점(1995년) 붕괴사고’ 등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인적 재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인적재난을 포함한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어 2004년에는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가 있었고, 2020년부터는 국경을 넘는 국제적 재난인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대유행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사회재난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병 재난(SARS, MERS 등)은 세계적인 대유행을 맞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재난을 함께 겪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래에는 본 논문의 연구 취지를 감안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김성진·박경우(2009)는 송레문 화재사고(2008년)에 대하여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텔레비전 뉴스 역시 ‘구성된 현실’이라는 프레이밍 이론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건이 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매체는 국지적 사건을 전면화함으로써 사회적 사건으로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Meyrowitz, 1985; 김성진·박경우, 2009에서 재인용).”라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 결과, 보도시간 추이를 보면 사건발생 3일째 이후 보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일본의 경우 사건발생 후 6일째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과 대조적이다.), 내용적으로는 책임소재 규명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나, ‘관리실태’와 ‘대책마련’ 등의 관련기사에서는 보도량과 심층성이 모두 부족했다. 앵커멘트에서는 사실적 표현보다 감정적이고 주관적 표현을 많이 쓰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이 논문은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을 다룬 부분이 인상적인데, 그 중 하나는 ‘텔레비전 뉴스의 연성화’이다. 텔레비전 뉴스는 짧은 시간에 일과성 흐름으로 지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무거운 경성 뉴스를 다루기 보다는 사적 영역이면서 인간적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의 비중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선정주의에 대한 우려인데, 이 부분은 상업주의와 맞물려 있어서 다른 매체와의 차별점이 크지 않고 선정주의 판단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밝혔다.

최민음·정희수(2018)는 지카 바이러스 보도에 대한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KBS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보도하면서 단순히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사실 전달 프레임’의 비중이 전체 관련 보도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바이러스의 원인 및 예방법을 소개하거나 진단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프레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부분에서 일본의 NHK에서 재해대책규정에 따라 언론사 취재인력을 훈련시키는 점과 일본 언론사의 경우 지진이나 원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난 전문 취재인력 양성을 강조하였다.

최진봉(2016)은 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지상파 3사와 JTBC의 재난보도를 분석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역사적인 오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난보도의 기본인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에서 미흡하였으며, 선정성과 오보양산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반면, JTBC의 경우 재난보도 과정에서 사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지상파 3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관련 보도량을 줄인 반면, JTBC는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 보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JTBC의 보도로 인해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논의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해결에 기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영욱·함승경·김영지(2017)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미디어보도에 대해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판적 담론은 담론적 실천을 통한 담론 경쟁을 헤게모니 확보 경쟁으로 간주하며 담론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그 결과 보수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적극적으로 담론적 실천을 이룬 담론은 ‘정부·사회적 책임’ 담론과 ‘사고 원인조사’ 담론이었고, 진보 일간지(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는 ‘정부 책임’ 담론과 ‘진상규명’ 담론이었다. 보수 일간지는 세월호 침몰을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축소시킨 반면, 진보지는 세월호 침몰은 사고가 아닌 정부의 무능과 사회구조의 모순이 야기한 참사로 보고 정부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담론은 체제를 방어하려는 보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은아·김형주(2017)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룬 재난보도 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표현으로는 ‘대형-’과 ‘최악’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구조 상황을 과장하는 표현으로는 ‘충동원’과 ‘급파’, ‘필사’ 등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극단적 표현도 있었는데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으로는 ‘오열하다’와 ‘항의하다’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과장 섞인 표현들은 ‘과어휘화’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희(2017)는 지역의 재난 뉴스 보도에서 드러나는 갈등구조와 취재 관행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목포MBC 기자가 서울MBC의 지휘부에 ‘그 안에 지금 수백 명이 갇혀 있다’는 보고를 3차

레나 했는데 지휘부에서 목살했고, 오히려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갔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장에서의 취재관행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난사고의 현장에서 기자들은 많은 선택을 신속하게 해야 상황에 처한다. 발생한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건 안에서도 어떤 소재에 주목하고, 어떤 취재원을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취재를 할 것인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그런 갈등구조 속에서 대다수의 기자들이 선택하여 집단적 행동양식으로 굳어진 관행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연구자는 기자들이 생산한 다큐멘터리 기록을 82건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로 취재과정과 보도과정에서의 갈등구조와 그에 대한 관행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표 5> 갈등구조와 보도관행

구 분	갈 등	관 행
취 재 과 정	재난현장 VS 정부발표	정부 발표 신뢰 (피해자 비신뢰)
	피해자인권 VS 뉴스거리	비윤리적 취재 (영상 중심 취재)
	현장 자율취재 VS 본사 지시 취재	툭다운 방식의 취재
	취재 경쟁 VS 협력 취재	비협력적 취재
보 도 과 정	현장 보고 VS 정부 발표	정부 발표 신뢰 (지역기자 비신뢰)
	정확 보도 VS 신속 보도	생중계식 보도
	[편집] 피해자 중심 VS 권력자중심	권력자 중심 편집
	[편집] 핵심사실 보도 VS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 편집
	[편집] 선정적 구성 VS 절제된 구성	선정적 편집

한지원·김영옥(2021)은 코로나19 한국대응 관련 국내 언론의 외신 인용 기사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세계적인 모델국가가 되었다는 외신의 호평이 국내 언론에 많이 인용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5개 신문사가 이용한 외신 기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보수언론은 ‘정부비판’ 국가이미지를, ‘사회시스템-부정’, ‘미래성장력-부정’ 국가정체성을 나타내었고, 진보언론은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신뢰’ 국가이미지에, ‘사회시스템-긍정’, ‘미래성장력-긍정’ 국가정체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시기가 지날수록 보수언론에서도 ‘정부비판’ 국가이미지에서 ‘인프라’ 국가이미지가 증가했으며, ‘사회시스템-부정’ 국가정체성은 감소하고 ‘글로벌리더십-긍정’과 ‘미래성장력-긍정’의 국가정체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 관련 미디어 보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승례문 화재사고의 경우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량은 3일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대책마련 등 관련보도는 심층성과 보도량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은 KBS 방송사의 보도를 분석한 것인데 역시 사실 전달 프레임 위주의 보도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난보도의 기본인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에서 미흡하였으며, 선정성과 오보까지 양산했던 것이다. 또한 방송에서 자극적 표현이 자주 사용되어 ‘과어회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연구자도 있었고, 지역기자에 대한 비신뢰 관행을 추적한 연구도 있었다.

방송사가 아닌 신문사의 재난 보도에 대하여서는 주로 이념 성향에 따른 분석이 이뤄졌는데, 담론분석이든 프레임 분석이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다른 담론과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 장에 이어서 다루고자 한다.

2. 미디어 프레임 관련 선행연구

앞서 이론적 배경을 다루면서 미디어 프레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프레임 이론에서 말하는 프레임(frames)에는 미디어 프레임 외에도 인식 프레임(cognitive frames)이 있다. 미디어 프레임을 다시 설명하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심적 아이디어 또는 스토리라인”이며, 인식 프레임은 “개인의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의 집합으로서 정보의 처리를 가이드하는 것”이다(Entman, 1993; 우지숙·최정민, 2015에서 재인용). 프레임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디어 텍스트의 내용이 고정된 것으로서 시청자들에게 균일하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맥락 하에서 미디어 프레임과 인식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텍스트와 이를 만든 저널리스트, 이를 수용하는 시청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van Dijk, 1988; Pan & Kosicki, 1993; 우지숙·최정민, 2015에서 재인용).

공적 이슈와 언론과의 관계는 언론학에서 다루는 고전적 연구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의 프레임 연구는 언론사가 공적 이슈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미디어 프레임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 소개할 선행연구 역시 대부분 미디어 프레임에 관한 논문이다.

이준웅(2001)은 뉴스 프레임 이론에 근거하여 갈등적 이슈(이 논문에서는 신문고시)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뉴스의 구성방식과 내러티브 구조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신문고시에서 뉴스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정부통제’ 프레임, ‘자율시장’ 프레임, ‘시장개혁’ 프레임이 그것이다. 동일한 신문고시를 보더라도 ‘정부통제’와 ‘자율시장’ 프레임을 접한 응답자는 신문고시의 부활이나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대하는 쪽으로 해석하였고, ‘시장개혁’ 프레임을 접한 응답자는 신문고시의 부활에 찬성하는 쪽으로 해석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 연구의 의의는 신문기사의 내용은 같아도 미디어 프레임이 다를 경우 수용자의 해

석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점이다.

이준웅(2005)은 다시 한번 갈등사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에 대한 프레이밍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전적 여론 형성에 대한 이론은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을 사회정치적 여론과정에 적용시킨 것인데, 이 이론은 여론 변화의 복잡하고 미묘한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여론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언론의 미디어 프레임과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이라고 설명한다. 즉, 뉴스 프레임이 개인의 해석적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며, 해석적 프레임은 다시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주요 언론사에 나타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뉴스프레임을 분석하고, 그렇게 추출된 뉴스 프레임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율 변화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 본인의 방법(이준웅, 1997)을 사용하여 주제함수를 선정하고, 주제함수에 맞는 주제진술문을 수집한 후, 주제진술문들의 집합이 의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게 되면 하나의 프레임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081개의 신문사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뉴스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투명한 접촉’, ‘안보에 기반한 통일’, ‘외교 강화’, ‘화해적 정책 강화’ 라는 프레임이다. 언론에서 ‘외교 강화’ 프레임을 강조할수록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하였고, ‘화해 강화’ 프레임이 많이 등장할 경우 지지율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거주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통일에 대한 해석 프레임은 ‘현실주의’, ‘불신·불안’, ‘신중 외교’, ‘인도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뉴스 프레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상당부분 중첩되는 결과로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적 프레임이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신·불안’ 프레임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외교우선’과 ‘인도주의’ 해석 프레임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주현(2020)은 코로나19 관련 보도 프레임을 연구하였다. 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인데 보수매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보매체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까지 61일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6>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구분	보수매체	진보매체
보도량	874건	728건
취재원	지자체, 전문가(교수/연구원), 기업체 위주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정당) 위주
경제적 손실	금융, 부동산, 운송 분야 위주 보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위주 보도
사회적 프레임	차별 강조	확산방지를 위한 치료 강조
위기대처 프레임	정부 정책 비판 중심	마스크 대란 등 실생활 관련 문제점 중심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매체와 진보매체는 코로나19를 보도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며, 보도량과 취재원,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나타냈다.

고동완·이창현(2022)은 연구범위를 좁혀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신문에 실린 중국 관련 사설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을 발견한 후, 시기별로 프레임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7> 코로나19 확산 시기 중국 관련 사설 프레임

언론사	조선일보	한겨레
프레임 중국 '우한' 지명 사용	'우한 폐렴' 지속 사용	병명에 지역명 사용자제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 입국허용이 확산 의 주요원인, 중국 눈치 보기, 시민 요구 외면	비현실적, 외국인 차별, 외교분쟁 우려, 과잉조치
중국에 대한 시각	중국은 자국 패권 우선, 미국이 한국에 도움됨	코로나19 한중협력 필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정부 책임론	정부에 대한 불신, 코로 나19에 능장대응 비판	초동 대응 및 확진자 감 소시킨 정부대응 긍정

두 언론사는 프레임이 시기별로 변화함에도 지속적으로 대립적 구도를 유지하였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보다는 신문사의 기존 가치를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나영·하상복·손영우 등(2013)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 보도행태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였으며, 각각의 언론사는 보수, 진보, 중도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언론사의 이념성향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모바일 투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사의 69.1%가 부정적 프레임을 나타냈으며,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부정적 프레임이 각각 17.6%, 29.5%를 나타내어 언론사의 이념적 지형이 보도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지숙·최정민(2015)는 5개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하여 공기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을 연구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일간지의 293건의 사설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공기업 문제점 강조’, ‘강력한 개혁 추진’, ‘정부/정권의 낙하산인사 책임’, ‘민영화/매각 신중론’, ‘공공성 강조’ 등 다섯 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언론보도 분석과 달리 공기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성향보다는 각 언론사의 개별적 차이가 더 컸으며, 언론사 간에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역대 정부가 강조해온 신공공관리론적 입장의 효율성 관점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 역시 비슷한 맥락의 담론을 재생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주목하였는데, 연구자는 이준웅(1997)의 귀납적 프레임 도출방식을 사용하였고, 주제진술문을 도출하여 행렬표를 만들고 주제진술문 간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를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도식화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섯 개의 주제진술문 그룹에서 주제진술문을 재구성하여 의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만든 것이 프레임이 된 것이고, 그렇게 도출된 프레임이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개인 것이다. 이런 귀납적 프레임 도출 방식은 후속 연구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어서 언급할 논문들은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한 논문들이다.

김승민(2014)는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언론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4개 일간지에 대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에너지 정책 관련 222개 사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출된 프레임은 네 개로, ‘에너지 정책 개선’, ‘원전 확대 여부’, ‘에너지 절약 강조’, ‘효율적 자원외교 필요’가 그것이다. 이념성향별 차이는 ‘원전 확대 여부’ 프레임에서 두드러졌는데, 한겨레신문은 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원전 확대 정책에 긍정적 입장으로 주로 보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홍지현(2022) 역시 같은 연구방법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8개 언론사의 사설 201건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출된 프레임은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저가정책으로 인한 과소비’,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원가 공개’,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등 다섯 가지이다. 언론사의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와 ‘주택용 누진제 개편’ 프레임에 대해 진보성향 언론사가 더욱 많은 빈도로 보도를 하였고,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프레임에서는 조선일보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르고 한전의 적자가 생겼다고 현저히 높은 빈도로 보도하였다. 종합지와 경제지에서 나타나는 차이 역시 확인되었는데, 경제지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와 ‘전

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프레임에서 종합지보다 잦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 장에서 논의한 언론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언론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문제	연구결과
이준웅(2001)	신문고시에 대한 뉴스 프레임	프레임에 따른 수용자의 해석차이 존재
이준웅(2005)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의 해석프레임이 상당부분 중첩
박주현(2020)	코로나19 관련 보도프레임	보수·진보매체의 프레임 차이 확인
고동완, 이창현(2022)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관련 사설의 프레임	보수·진보매체의 중국 관련 프레임 차이 확인
김나영, 하상복, 손영우(2013)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일간신문 뉴스 보도행태	언론사의 이념적 지형(진보/보수/중도)에 따른 프레임 차이 확인
우지숙, 최정민(2015)	공기업에 대한 언론 프레임	기존 연구와 달리 이념성향보다는 언론사별 차이가 크음을 확인하였고,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유사점이 더 많음을 확인
김승민(2014)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론 프레임	이념적 성향 차이가 ‘원전 확대 프레임’에서 두드러짐
홍지현(2022)	전기 요금에 대한 언론 프레임	이념적 성향 차이에 더해 종합지와 경제지 간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 차이 확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각기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용자의 해석차이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에서 보수·진보 언론사의 프레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공기업에 대한 언론 프레임 연구에서는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유사하였으며, 이념적 성향보다는 각 언론사별 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런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프레임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언론사가 사용하고 있는 보도 프레임에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 언론사 중 이념적 성향이 잘 알려진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중도성향의 한국일보 등 6개 신문사에서 보도한 사설 기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이들 언론사들이 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각 언론사간 프레임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 활용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해 볼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전후로 주요 프레임이 바뀌게 되는지 등 프레임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기사에는 어떠한 프레임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이 언론사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이 보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언론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언론사의 논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며(우지숙·최정민, 2015), 또한 칼럼과 논평기사에서도 해당 언론사의 입장이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사실, 칼럼, 논평을 묶어 논설기사라고 하며, 본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에 게재된 논설기사 중 사실기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통상 언론사에서 하루에 3건의 사실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실만 하루에 18건씩 보도된다. 기간을 100일로 설정하면 사실만 1,800 건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며, 거기에 논평과 칼럼까지 더하면 너무나도 방대한 논설기사가 쏟아지는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실기사만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태원 참사’ 발생일로부터 100일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1절에서 국정조사 전후에 나타나는 프레임 활용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기간을 국정조사 전후로 구분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기간 전체를 놓고 전체 사실 기사를 분석해 보면, 국정조사 전에는 경찰이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경찰이 꾸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책임을 져야 할 고위직에 대하여서는 전혀 수사 성과가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정조사가 각 신문사 사실에 주요 의제로 올라오게 되었다. 또한 국정조사 이후에 이어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의결 등 국회발 굵직한 이슈들이 사설 기사의 주요 아젠다로 올라오면서 국정조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기사 흐름이 대세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연구기간 100일 중 50일 전후로 구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 이슈의 분기점인 ‘국정조사’를 보도 시기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의 대상은 6개 언론사의 사설기사이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이태원’, ‘10.294’, ‘참사’, ‘사고’, ‘재해’, ‘헬러원’, ‘희생’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당 키워드가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설 기사를 수집한다. 누락된 연구대상이 없도록 각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최종 연구대상 사설 기사를 확정한다.

3. 연구 방법

이번 연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가 어떤 보도 프레임으로 접근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프레임 활용이 언론사별, 이념적 성향별, 시기별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적합한 이론을 탐색한 결과, 앞선 선행 연구(이준웅, 2005, 우지숙·최정민, 2015, 홍지현, 2022.)에서 사용되었던 귀납적 프레임 도출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이준웅, 1997)

이준웅(1997)이 사용한 뉴스 프레임의 구성방식은 반다이크의 뉴스 거대담론구조 개념과 버크의 텍스트 구성방법의 원리 개념을 사용한다.(이

4)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결지어 위험한 지역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막고, 해당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또다른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태원 참사’를 ‘10.29 참사’로 부르기도 한다.(출처 : MBC뉴스, “‘이태원 참사’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2022. 11. 5.)

준용, 1997; 이준용, 2005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뉴스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제 함수는 주제 행위자(행위자는 무엇을 했는가?), 대항 행위자(대항 행위자는 무엇을 했는가?), 대상(대상의 주요 속성은 무엇인가?), 방식(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배경(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함의(무엇을 위한 것인가?)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제 함수에 대입될 수 있는 각각의 진술문을 뉴스 내용에서 찾아 그것을 주제 진술이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주제 진술들이 다른 주제 진술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내적인 의미를 담은 이야기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미디어 프레임으로 정의하였다(이준용, 1997; 우지숙·최정민, 2015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도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내용에서 뉴스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제 함수를 발견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이 대형 사고나 참사에 적합한 주제 함수를 설정한 후 실제 수집된 사설기사 전체를 애별로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중복되는 주제 함수와 사용되지 않는 주제 함수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제 함수를 확정한다.

가. 대상 : ‘이태원 참사’의 속성은 무엇인가?

- 대형 참사를 다루는 논설 기사의 대부분은 특히 참사 발생 초기나 수사에서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는 단계에 이르면, 참사에 대하여 정의(또는 재정의)하거나 참사의 속성을 다루게 되므로 이태원 참사의 속성은 반드시 주제 함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주제 행위자(참사 당시 및 사후) : 희생자, 유족들,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 등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① 희생자들이 한 발언 및 행위
- ② 유족들이 한 발언 및 행위
- ③ 일반 시민들이 한 발언 및 행위
- ④ 시민단체 등이 한 발언 및 행위

- 대형 참사 이후에 여러 이슈가 함께 발생하면서 희생자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행위나 발언이 주목받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므로 주체행위자의 행위를 위와 같은 범위를 포함한다.

다. 대항행위자A(참사 발생 이전 및 당시)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① 대통령 및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②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③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④ 경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 대항행위자의 행위는 참사 발생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시기를 한정하여 주체함수를 설정하고, 참사 발생 이후의 정부측 행위는 따로 주체함수를 구성한다.

라. 대항행위자B(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① 대통령 및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②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③ 지방자치단체(서울시나 용산구 등)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④ 경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 대항행위자B의 행위는 참사 발생 이후의 정부측의 행위와 발언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다.

마. 대항행위자C(참사 발생 전후) 국회와 정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①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② 여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③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 민주사회에서 행정부와 국회는 구분되는 별개의 주체로 나타난다. 또한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닌 국회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주체이므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대항행위자C로 설정한다.

바. 판단 : 언론사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 위 주제함수들에서 대상과 주제행위자 그리고 대항행위자의 행위가 밝혀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언론사의 판단이 반드시 사실 기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내리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주제함수로 설정한다.

사. 방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무엇인가?

- 하나의 프레임은 하나 이상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게 된다. 주제진술문 중 사안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따로 주제함수로 분류되어야 프레임 구축시 완성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사실 기사를 검토하여, 확정된 주제 함수를 중심으로 상호 배타적인 주제 진술문을 추출한다. 그리하여 각 주제 함수마다 포함되는 주제 진술문을 확정하게 되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 기사마다 각각의 주제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세로축에는 사실 기사를, 가로축에는 주제진술문을 배치한 행렬표로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코더를 더 투입될 것이며, 수행한 코딩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주제 진술문의 일치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제 사실기사와 주제진술문 행렬표를 활용하여 주제 진술문의 등장빈도를 기준으로 주제 진술문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한다. 군집분석 결과를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성이 높은 주제 진술문끼리 군집으로 묶어, 군집별로 정리한다. 이렇게 군집별로 정리된 주제진술문들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제진술문들을 이야기 구조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이야기 구조가 최종적인 프레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프레임과 그에 속하는 주제 진술문이 모두 확정이 되면, 언론사별로 주제 진술문의 수를 집계하고, 특정 프레임의 군집에 포함되는 각 주제 진술문의 수를 언론사별로 정리한 다음, 각 언론사 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어서 위에

서 정리한 언론사별 데이터를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정리하여 역시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시기에 따라 ‘국정조사’ 전과 후를 구분하여 프레임 활용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이태원 참사 경과 : 언론사 사설을 중심으로

1. 프레임 제시 전 보도 경과 연구 필요성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사 사설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언론사 사설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참사에 대한 사설기사가 이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지속적으로 이슈가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프레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맥락적 위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양의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중복된 보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요 사항 위주로 참사 이후의 경과보도를 정리하여 분석 결과에 나타난 프레임이 주요 사항과도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태원 참사 보도의 주요 흐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10월 31일 양일간 연구대상인 6개 신문사에서 무려 12개의 사설을 참사 관련 기사로 채웠다. 주요 보도사항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나서 비통하다는 내용이 많았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

지 의문” 등의 발언을 하여 언론으로부터 면피성 발언으로 비판 받았다.

2022년 11월에 들어서자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 혐오표현,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사설기사가 여럿 등장했으며, 경찰이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다급하게 걸려온 112 신고 전화를 묵살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언론사 사설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는 ‘셀프 수사’가 되어 엄정한 진상파악 및 책임추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후 수사가 더욱 진전되면서 참사 당일에 정부 내 보고체계가 거꾸로 작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46분만에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고, 55분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파악하였다. 서울특별시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각각 참사가 일어나고도 1시간 21분, 1시간 59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재난안전 보고·지휘체계의 붕괴에 대해 한국일보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나라” 라며 비판하였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에 이르러서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시작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혀 참사 9일 만에 공식 회의에서 첫 사과를 하였다.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참사 관련 외신기자회견 당시의 농담을 사과하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선 본인의 발언을 사과하였다. 하지만 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 더 나아가 국정쇄신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 발언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고생많았다”고 격려하여 의아함을 자아내었다.

곧이어 11월 14일에는 신생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

에서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명단공개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다수 언론의 사실에 올라오면서 이슈가 명단 공개로 집중되었다.

이 시기 동안 계속 이어져 오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재난 관리에 총 책임을 져야할 윗선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못하여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고, ‘셀프수사’에 이어 ‘꼬리자르기 수사’에 따른 우려를 여러 언론사에서 제기하였다. 자연스럽게 이슈는 국정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국정조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참사발생 25일만인 11월 23일에 이르러 마침내 여당과 야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하여 많은 언론사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몇몇 언론사는 국정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참사 발생 43일 만인 12월 11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전원사퇴를 선언하였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탄핵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법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경질이 논란의 중심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임건의안 이슈와 예산안 처리 이슈로 인하여 국정조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조사일정의 많은 부분을 흘려보냈고, 이에 대하여 국정조사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사가 이어졌다. 여당은 이에 대해 이번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국정조사 역시 조사를 제대로 못하며 국정조사 일정만 그냥 흘려보내고 있게 되자,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12월 10일에 창설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어렵게 구성된 유가족 협의회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여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해를 넘겨 2023년 1월 13일에 이르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3일간의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재난관리 총책임자는 모두 무혐의·내사종결 처분하여 ‘셀프수사’와 ‘꼬리 자르기’ 수사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은 2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이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표 9> 이태원 참사 보도의 주요 흐름

구분	주요 이슈
2022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나서 비통함 ▪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책성 발언 논란
2022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 혐오표현, 가짜뉴스 논란 ▪ 경찰의 참사 당시 112 신고 전화 목살 비판 ▪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으나 ‘셀프수사’ 우려 ▪ 참사 당시 거꾸로 된 재난 보고·지휘 체계 비판 ▪ 뒤늦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사과 발언 ▪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 비판 ▪ 인터넷 매체의 동의없는 명단공개 비판 ▪ 국정조사 공방 이후 국정조사 합의 관련 사항
2022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및 대통령의 거부 ▪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 논란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창설 및 관련 논란
2023년 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수사본부의 ‘꼬리 자르기’ 수사결과 발표
2023년 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

제 2 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프레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사 사설기사의 프레임을 찾기 위해 연구 대상이 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설들 144 건에 대해 애벌 검토를 시행하였고, 주제함수는 대상의 속성, 주제행위자, 대항행위자, 언론사의 판단,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가. 대상 : ‘이태원 참사’의 속성은 무엇인가?

나. 주제행위자(참사 당시 및 사후) : 희생자, 유족들,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 등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① 희생자들이 한 발언 및 행위
- ② 유족들이 한 발언 및 행위
- ③ 일반 시민들이 한 발언 및 행위
- ④ 시민단체 등이 한 발언 및 행위

다. 대항행위자A : (참사 발생 이전 및 당시)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① 대통령 및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②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③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④ 경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라. 대항행위자B :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① 대통령 및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②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③ 지방자치단체(서울시나 용산구 등)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④ 경찰은 무엇을 하였는가?

마. 대항행위자C : (참사 발생 전후) 국회와 정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①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 ② 여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 ③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바. 판단 : 언론사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사. 방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주요 행위자 중 대항행위자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구분하였고, 정부의 행위도 시기별로 ‘참사 발생 이전 및 당시’, ‘참사 발생 이후’로 구분하여 시기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론사의 사설의 특징상 언론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별도의 주제함수로 설정하였으며, 하나의 프레임을 완결시키기 위하여 대응 방안도 별도의 주제함수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주제함수를 중심으로 102개의 주제진술문을 찾았다. 주제진술문과 사설들을 모아 행렬표를 구성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주제진술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분석 기준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복된 진술문을 통합하고, 등장 빈도가 극히 적은 진술문을 삭제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37개의 주제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중복된 진술문은 예를들어,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와 같은 주제진술문이 있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 역시 중요하나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론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중복으로 보아 최종 진술문에서 배제하였다. 등장 빈도가 극히 적은 진술문은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농담과 망언, 극우단체의 막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사실 등 여러 건이 있었다. 최종 진술문에서 해당 진술문들을 배제한 것은 이들 진술문을 모두 포함할 경우 군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최초에 발견된 주제진술문 수에서 상당수의 진술문이 빠지게 된 것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의 특징 때문이다. ‘참사 발생 → 경찰 수사 → 비동의 명단 공개 → 국정 조사 → 장관 해임 건의 → 국정조사 연장 → 장관 탄핵 소추’의 큰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로 주제진술문은 계속 추가되었으나 곧 다른 이슈들로 넘어가면서 이후 다시 주제진술문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각각의 이슈가 발생한 시기를 각각 한정하여 별도로 군집분석을 해야 하므로 단기간 이슈로 발생한 주제진술문들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표 10>은 최종 결정된 주제함수와 주제진술문이다. 한 건의 사설에서 적게는 1개의 주제진술문부터 많게는 7개의 주제진술문을 포함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수행한 코딩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설의 10%(15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더 간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83의 결과를 얻었다.

<표 10>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사 사설에 나타난 주제함수와 주제진술문

가. 대상 : 이태원 참사의 속성은 무엇인가?

- A1. 이태원 축제는 주체 없는 행사였다.
- A2.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나. 주제행위자 : 희생자, 유족들, 일반시민들, 시민단체 등은 무엇을 하였는가?

- B1.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 B2.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사퇴)에 동의하는 여론조사가 많았다.
- B3.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다. 대항행위자A : (참사 발생 이전 및 당시)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C1.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은 없거나 부실하였다.
- C2. 참사 당시 경찰 투입인력이 적었다.
- C3.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묵살하였다.
- C4. 참사 현장에 국가 또는 정부는 없었다.

라. 대항행위자B :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 D1.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이른바 ‘윗선’은 제외되었다.
- D2. ‘참사·희생자’를 ‘사고·사망자’로 지칭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 D3. 행정안전부 장관이 “폼나게 사표내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 D4.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D5.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격려/두둔 하였다.
- D6.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였다.
- D7.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중인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성과는 없다.
- D8.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결국 ‘윗선 무혐의’로 수사종결되었다.

마. 대항행위자C : (참사 발생 전후) 국회와 정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 E1.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청하였다.
- E2.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 E3. 여당 및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였다.
- E4. 민주당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 E5.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 E6.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 E7.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다.
- E8. 국정조사가 공전하고 있다.
- E9. 국정조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E10.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바. 판단 : 언론사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 F1.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다.
- F2. 정부는 주체 없는 행사여도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해야 했다.
- F3. 특별수사본부의 ‘꼬리 자르기’ 수사가 우려된다.
- F4. 국민의힘은 민심보다 대통령 심기 살피기와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급급하다.

사. 방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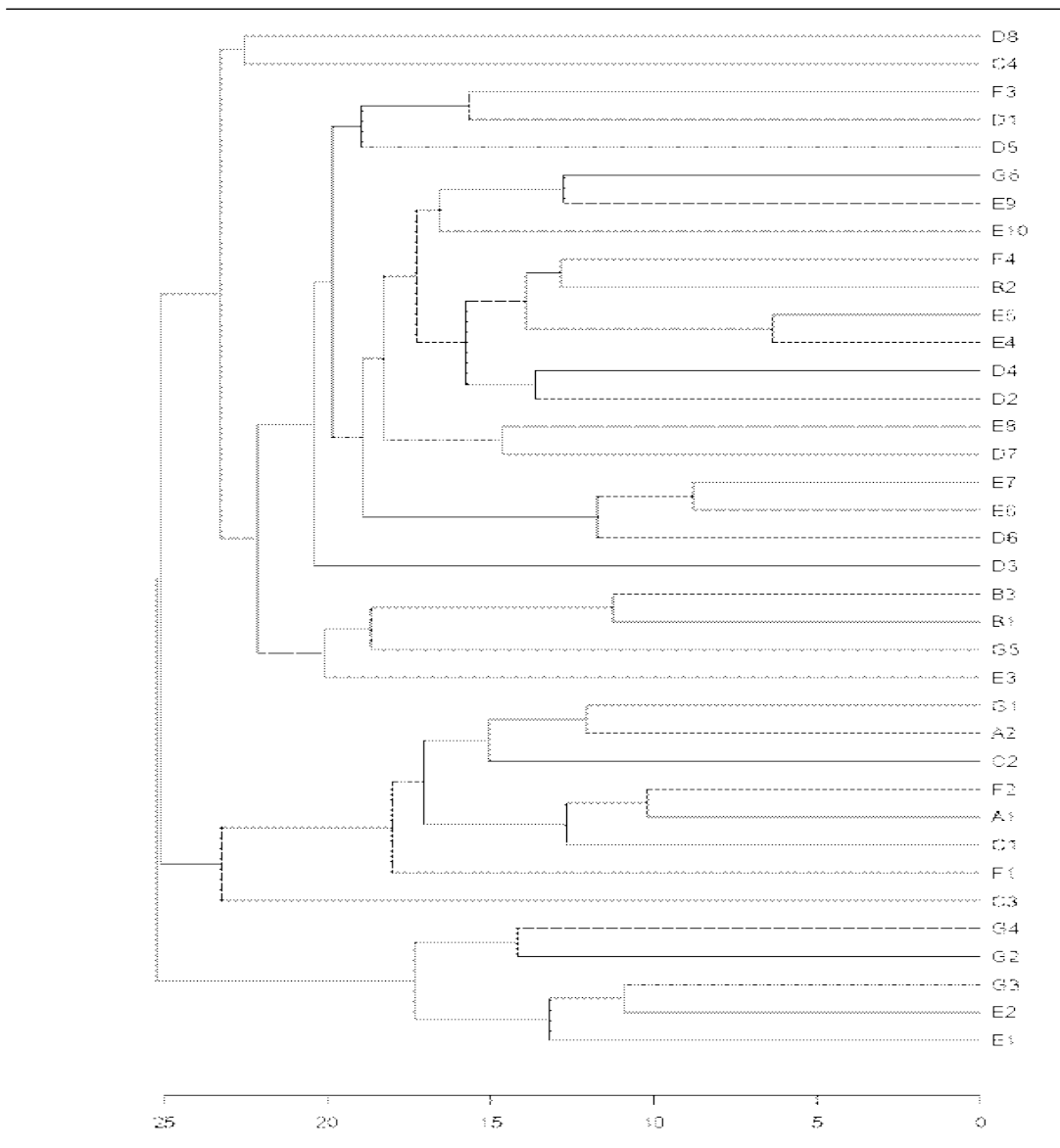
- G1. 정부는 안전관리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G2.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 G3. 국정조사에 여당도 동참해야 한다.
- G4.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는 특검이 필요하다.
- G5. 진실규명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꼬리 자르기’도 안된다.
- G6. 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주제진술문의 코딩 작업을 거친 후 37개의 주제진술문 변수를 가로에 배치하고, 144개의 사설을 세로로 배치하여 행렬표(37 × 144)를 구성하였다. 이 행렬표를 사용하여 주제진술문의 등장빈도를 기준으로 주제진술문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적절한 수의 군집을 찾아내게 된다. 최적의 군집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시행하고, 추가로 cluster plot(군집 구성)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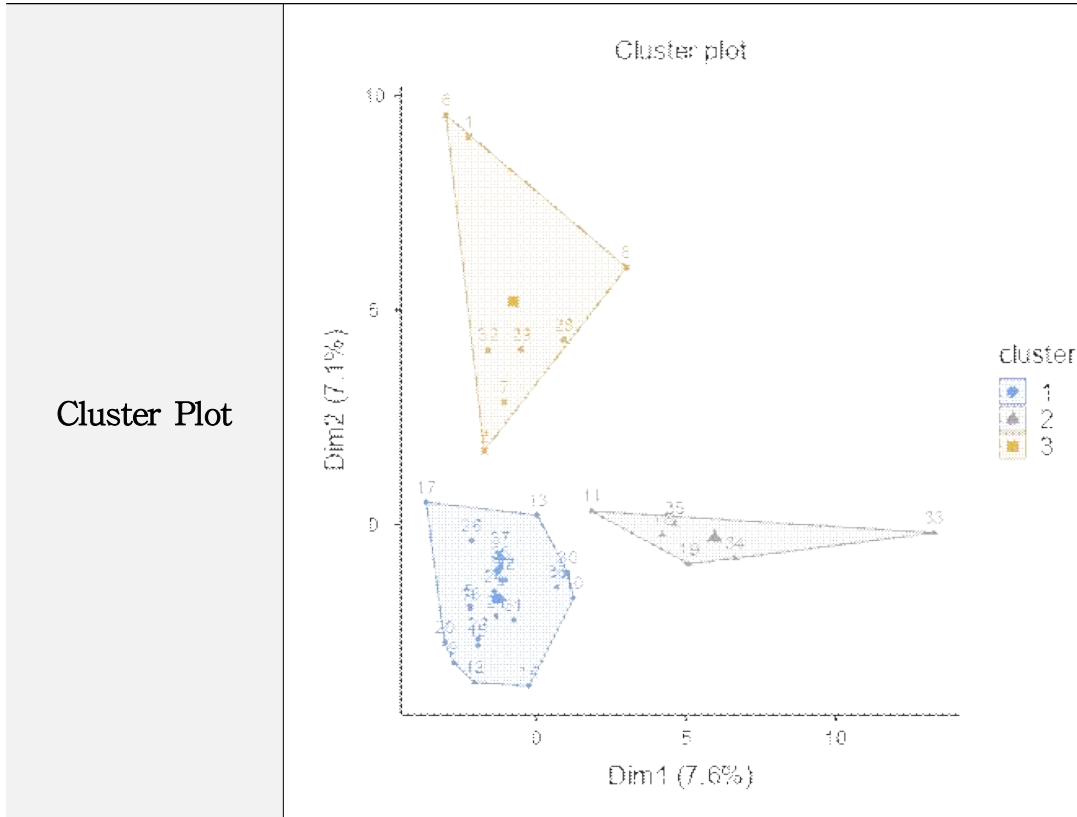
래프를 함께 검토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거리측정방법(Distance)과 ward.D2 클러스터링 방법(Clustering method)을 사용하여 덴드로그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은 3개이며 구성요소인 주제진술문 갯수는 각각 24개, 8개, 5개로 나타나 적정 군집의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그림 2>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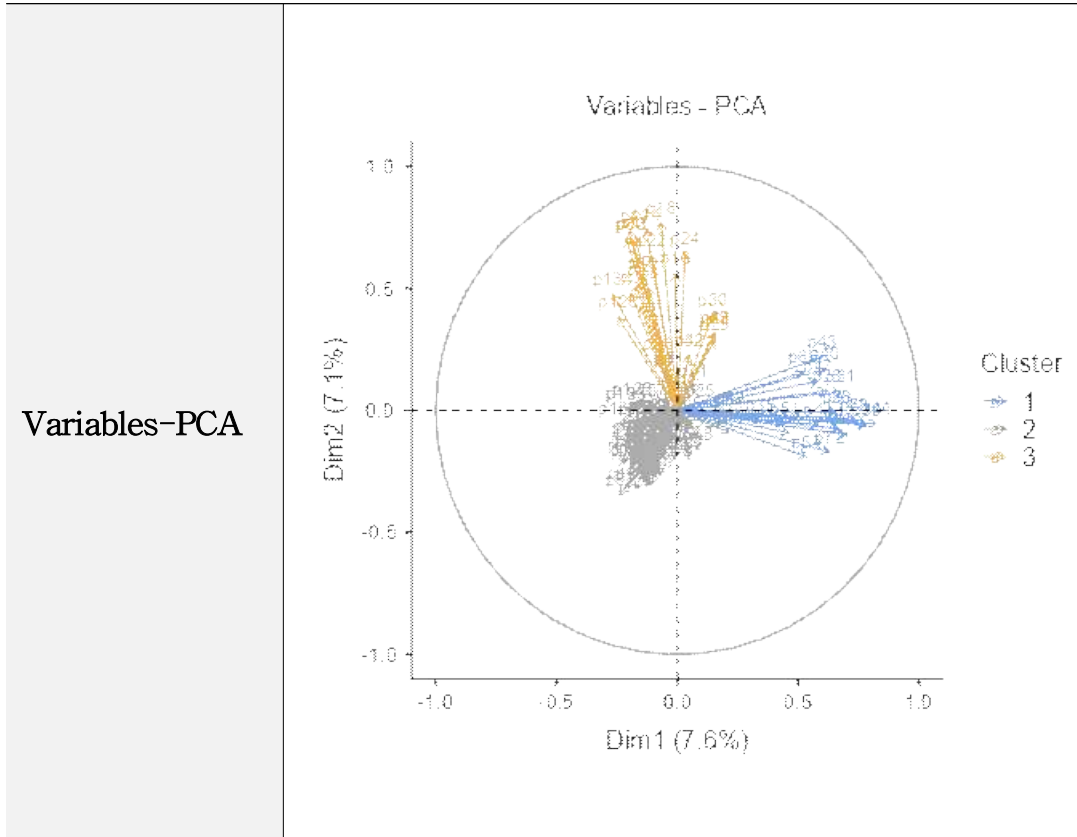
<그림 3> 군집분석 : cluster plot 그래프



3개의 군집으로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cluster plot(군집 구성), 그래프를 추가로 살펴보면, 군집수가 3개인 경우 상호 구분이 용이한 수준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프레임을 도출할 때 다시 살펴볼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아도 3개의 군집으로 하여야 전체적인 프레임 구성에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최적의 군집수는 3개로 지정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 및 추가적 방법을 통해 결정한 바대로 최적의 군집 수를 3개로 지정하고, K-means 군집분석을 시행한다. 알고리즘은 Hartigan-Wong방법, 난수시작값은 10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 수 3개에 주제진술문이 각각 8, 6, 23개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 아래의 variables-PCA(변수-주성분분석) 그래프이다.

<그림 4> 군집분석 : variables-PCA 그래프



PCA 그래프를 보면 3가지 군집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최초의 주제진술문에서 먼저 중복된 진술문을 제외하자, 주제진술문의 수가 102개에서 80여개로 줄어들었으나 군집분석 결과 적절한 군집을 이루는 형태가 도출되지 않았다. 군집화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의 진술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사용빈도가 낮고 주요 주제진술문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진술문들을 다시 배제하고 참사보도의 주요 흐름을 고려하면서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최종 진술문은 37개로 줄어들었고, 위와 같이 군집들이 겹치거나 밀집되지 않은 적절한 형태의 군집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3가지로 군집화 된 결과를 정리하여 각 군집별로 주제진술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 11>로 나타난다.

<표 11> 군집별 주제진술문

군집1.

- A1. 이태원 축제는 주최자 없는 행사였다.
- A2.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 C1.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은 없거나 부실하였다.
- C2. 참사 당시 경찰 투입인력이 적었다.
- C3.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묵살하였다.
- F1.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다.
- F2.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여도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해야 했다.
- G1. 정부는 안전관리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군집2.

- D2. ‘참사·희생자’를 ‘사고·사망자’로 지칭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 E1.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청하였다.
- E2.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 G2.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 G3. 국정조사에 여당도 동참해야 한다.
- G4.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는 특검이 필요하다.

군집3.

- B1.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 B2.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사퇴)에 동의하는 여론조사가 많았다.
- B3.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 C4. 참사 현장에 국가 또는 정부는 없었다.
- D1.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이른바 ‘윗선’은 제외되었다.
- D3. 행정안전부 장관이 “폼나게 사표내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 D4.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D5.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격려/두둔 하였다.
- D6.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였다.
- D7.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중인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성과는 없다.
- D8.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결국 ‘윗선 무혐의’로 수사종결되었다.
- E3. 여당 및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였다.

-
- E4. 민주당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 E5.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 E6.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 E7.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다.
 - E8. 국정조사가 공전하고 있다.
 - E9. 국정조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E10.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F3. 특별수사본부의 ‘꼬리 자르기’ 수사가 우려된다.
 - F4. 국민의힘은 민심보다 대통령 심기 살피기와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급급하다.
 - G5. 진실규명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꼬리 자르기’도 안된다.
 - G6. 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귀납적 프레임 도출 방식에 따르면, 프레임은 <표 11>에 나타난 주제진술문들의 군집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집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군집별로 주제진술문을 재구성하여 하나 이상의 의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완성되면 최종적인 언론 프레임이 결정되는 것이다. 위 3가지 주제진술문 군집을 이야기 구조로 정리하여 프레임을 도출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귀납적 언론 프레임

프레임1 : 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

이태원 헬러윈 축제는 따로 행사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 그래서 정부는 따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당시 경찰 투입 인력도 적었던 것이다. 부실한 사전 대책도 문제였지만, 참사 당시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경찰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음에도 묵살한 상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주최자(또는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참사를 우리는 ‘인재’라고 부르며, 정부가 제대로만 대체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프레임2 :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희생자’를 ‘사고·사망자’로 지칭하도록 지침을 내려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치하였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참함이 마땅하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도 고려해야 한다.

프레임3 : 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의 국가 부재 상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였다. 국민들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사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은 밝히지도 못하는 등 이른바 ‘윗선’은 제외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폼나게 사표내고 싶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두둔/격려 하였다. ‘꼬리 자르기’가 우려되던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윗선 무혐의’로 성과없이 종결되었고,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되었으나 국정조사 역시 공전하다가 국정조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였으나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였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전원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하였다. 국민의힘은 민심보다 대통령 심기를 살피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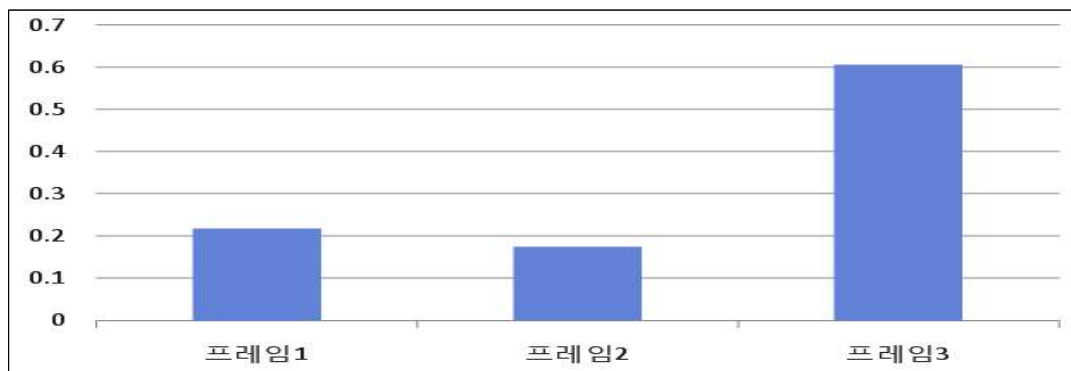
위 <표 12>를 보면 알 수 있듯, <프레임1>은 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프레임2>는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및 특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프레임3>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 국정조사, 해

임건의안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게 된 내용을 다루는 프레임이다. 의미를 정리하면, <프레임1>은 참사가 인재이므로 제도적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프레임2>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체가 되는 국정조사나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프레임3>은 정부 주도의 수사에 이어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발의까지 했지만 성과가 없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위에서 정리한 3가지 프레임에는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 참사 당시 부실대응, 참사 이후 부실한 수사, 제도적 해결방안 및 현재 탄핵소추 상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최적의 군집수를 정할 때, 전체 프레임의 내용을 고려하여 3개의 군집으로 하여야 전체적인 프레임 구성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 12>에서 도출한 3개의 프레임이 언론사의 사설에 등장하는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각 프레임의 언론사 사설에 등장한 비율



주로 사용된 프레임은 프레임3(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이었다. 프레임 등장 비율이 무려 0.61에 이른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프레임으로 참사 발생 이후의 거의 전 과정이 해당 프레임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프레임은 프레임1(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이다. 0.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대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과 지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도적 방안에 중점을 둔 프레임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빈도수가 적은 프레임은 프레임2(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이다. 0.17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시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전으로 한정이 되므로 다른 프레임에 비해 등장 빈도가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

<표 13> 언론사별 주제진술문 등장 빈도

군집	주제진술	언론사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합계
1	A1	2	3	3	2	1	2	13
	A2	6	2	0	0	1	0	9
	C1	2	3	4	2	1	2	14
	C2	2	1	0	0	2	1	6
	C3	4	2	3	4	1	2	16
	F1	3	1	1	3	3	0	11
	F2	0	2	1	2	1	1	7
	G1	1	2	1	1	1	1	7
소계		20	16	13	14	11	9	83
2	D2	5	1	0	0	1	2	9
	E1	2	0	2	0	2	2	8
	E2	3	1	0	1	3	2	10
	G2	8	1	0	0	7	4	20
	G3	3	1	0	0	3	3	10
	G4	3	0	0	0	3	3	9
소계		24	4	2	1	19	16	66
3	B1	3	0	0	1	1	3	8
	B2	3	0	0	0	3	0	6
	B3	1	1	0	2	2	5	11
	C4	8	1	0	2	4	1	16
	D1	5	2	0	0	6	0	13

D3	6	3	0	1	1	1	12
D4	5	0	0	0	1	0	6
D5	4	2	0	0	3	4	13
D6	3	2	0	1	3	1	10
D7	2	2	0	1	5	1	11
D8	4	3	1	1	4	2	15
E3	3	3	2	2	1	1	12
E4	3	1	0	1	3	2	10
E5	1	0	0	1	2	2	6
E6	3	3	1	1	1	2	11
E7	1	2	1	1	1	1	7
E8	2	1	0	0	3	0	6
E9	4	2	0	1	1	1	9
E10	1	1	1	1	1	1	6
F3	2	1	0	1	3	5	12
F4	3	0	0	0	2	4	9
G5	8	0	0	3	2	2	15
G6	3	0	0	0	2	1	6
소계	78	30	6	21	55	40	230
총계	122	50	21	36	85	65	379

<표 13>은 언론사별로 주제진술문 등장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 신문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의 주제진술문이 포함된 사설 수는 총 10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진보 성향 신문사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주제진술문 포함 사설 수는 보수 매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20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일보는 총 21건에 불과해 귀납적으로 추출한 3개의 프레임 자체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총 122건의 사설을 통해 가장 높은 주제진술문 등장 빈도를 보였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한국일보는 주제진술문 등장빈도가 65건으로 진보와 보수 신문사의 중간 정도의 빈도를 보였다.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진술문은 G2(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이며, 총 20건 등장하였다. 해당 주제진술문은 주로 진보 매체와

중도 매체에서 등장하였으며, 보수 매체는 1건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주제진술문은 C3(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목살하였다.)와 C4(참사 현장에 국가 또는 정부는 없었다.)이며 각각 16건 등장하였다. 가장 적게 등장한 주제진술문은 각각 6건 등장한 B2(행정안전부장관 문책(사퇴)에 동의하는 여론조사가 많았다.), C2(참사 당시 경찰 투입인력이 적었다.), D4(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E5(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E8(국정조사가 공전하고 있다.), E10(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G6(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이다.

보수 성향 언론사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은 주제진술문도 있으며, D4(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F4(국민의힘은 민심보다 대통령 심기 살피기와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급급하다.), G6(국정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주제진술문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진보 성향 언론사에는 모든 주제진술문이 등장하였다. 그동안 정치적 성향이 언론 지형도에 반영되어 온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 자체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보수성향 언론사의 사설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프레임 차이

1. 언론사별 차이

언론사에 따른 프레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시행하였다. 프레임1(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은 제도적 방안에 중점을 둔 프레임으로 조선일보가 평균 0.15개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이나 한국일보는 평균 0.04를 사용하여 조선일보와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프레임2(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는 중앙일보에서 0.01개로 나타났으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0.10개로 나타나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프레임3(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에서도 조선일보의 평균이 0.02개로 가장 저조했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평균 0.08개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아래 <표 14>에서 보듯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표 14> 언론사별 프레임 평균

구분	언론사						F(p)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프레임1	0.06	0.10	0.15	0.12	0.04	0.04	1.778(0.121)
프레임2	0.10	0.03	0.03	0.01	0.10	0.10	1.246(0.291)
프레임3	0.08	0.06	0.02	0.06	0.08	0.07	1.847(0.108)

2. 언론사의 성향별 차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른 언론 프레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표 16>의 결과를 얻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언론사별 차이검정과 달리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언론사 성향에 따른 차이 검정

구분	언론사		t(p)
	진보	보수	
프레임1	0.06	0.12	-2.218(0.030)*
프레임2	0.10	0.03	2.962 (0.004)**
프레임3	0.08	0.05	2.384 (0.019)*

* p<.05, ** p<.01

프레임1(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은 제도적 방안에 중점을 둔 프레임으로 보수 성향의 언론사에서 해당 프레임을 0.12개를 사용한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서는 평균 0.06개를 사용하여 보수 언론사에서 프레임1을 2배의 빈도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언론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홍주현·김경희, 2017)를 고려하면, 보수 성향 언론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시기이므로, 사실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파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향성으로 인하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이나 철저한 수사 요청 보다는 제도개선 쪽에 중심을 두는 프레임1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언론사 사실보다 많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2(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특검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프레임이다. 해당 프레임의 사용은 진보 언론 0.10개, 보수 언론 0.03개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레임1에서 보듯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인식은 모두 공유하고 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진보 언론사는 현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므로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프레임을 자주 언급하였으나, 현 정부와 성향을 같이하는 보수 언론사는 해당 프레임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프레임3(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은 진보 언론사 0.08, 보수 언론사가 0.05로 나타나 앞선 결과들보다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진보 언론사가 보수 언론사보다 해당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해당 프레임이 참사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프레임으로 참사 발생 이후의 거의 전 과정이 포함되므로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 간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기간별(국정조사 전후) 차이

국정조사를 전후하여 프레임 활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표 17>의 결과를 얻었다. 국정조사 전에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위주로 기사가 나왔다면, 국정조사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국정조사 연장, 탄핵소추 통과 등 국회 중심의 큰 이슈가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언론사의 사설기사에서도 주요 의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국정조사 전후(정확히는 국정조사 합의(2022.11.23. 전후)로 차이 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연구기간의 절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나 국가애도기간(5일) 전후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16> 국정조사 전후 차이 검정

구분	국정조사		t(p)
	前	後	
프레임1	0.13	0.02	5.196(0.000)***
프레임2	0.14	0.01	4.778(0.000)***
프레임3	0.03	0.11	-9.886(0.000)***

* p<.05, ** p<.01, *** p<.001

프레임1(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은 제도적 방안

에 중점을 둔 프레임으로 국정조사 이전에 자주 사설 기사에 언급되었던 프레임이다. 비교적 수사 초기에 경찰의 부실대응과 순서가 뒤바뀐 보고 체계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언론사의 방안이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을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조사 이전에 압도적으로 프레임 사용빈도가 높다.

프레임2(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른바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프레임의 사용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이 당연하다.

프레임3(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은 성과 없는 수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대한 주제진술문을 담고 있으며, 역시 국회가 주도하는 해임건의안 의결과 탄핵소추를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주된 이슈가 모두 국정조사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이다. 즉, 부실한 수사나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제외하면 국정조사 이후에 나타난 주제진술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프레임의 활용이 국정조사 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사 사설 기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여 참사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귀납적으로 확인하고, 언론사별, 언론사의 성향별, 국정조사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2023년 2월 9일까지 약 100일간 보도된 6개 언론사(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사설 기사를 수집하여 연구대상 144개의 사설 기사를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주제함수별로 주제진술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37개의 주제진술문과 144개의 사설 기사로 행렬표를 만들고 코딩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 및 K-means 군집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3가지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이야기 구조로 재구성하여 최종 언론 프레임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여 4가지 연구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기사에는 어떠한 프레임이 나타나는가?’ 에 대하여 3 개의 프레임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레임1은 ‘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 프레임이다. 이태원 헬러원 축제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정부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도 112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프레임의 내용이다.

둘째, 프레임2는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 프레임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희생자’를 ‘사고·사망자’로 지칭하게 하는 등 참사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였고, 이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여당에서는 거부하였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여당도 동참함이 마땅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

해서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셋째, 프레임3은 ‘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 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프레임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국가의 부재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고,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윗선 무혐의’로 끝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대통령은 그런 장관을 두둔하고 감쌌다. 어렵게 시작된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없이 기간을 마쳤으며, 해임건의안 역시 대통령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3가지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 참사 이후에 나타난 ‘꼬리 자르기 수사’, 안전 매뉴얼을 마련 제도적 해결방안, 성과없는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그리고 현재 탄핵소추 상황까지 모두 3가지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큰 흐름과 이슈가 적절히 프레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2>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이 언론사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프레임1에서는 조선일보가 평균 0.15가 나와서 한겨레신문의 0.04와 큰 차이를 보였고, 프레임2에서는 중앙일보가 0.01, 경향신문 등이 0.10으로 또다시 큰 차이를 보였다. 프레임3에서도 경향신문이 0.08인데 조선일보는 0.02로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3가지 프레임 모두 유의수준 0.0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3>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프레임1(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촉구)에서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진보 성향 언론사보다 해당 프레임을 2배 정도 더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과 여당에 대한 책임 여부나 철저한 수사보다는 제도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프레임1을 보수 언론사에서 자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레임2(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에서는 보수 정권과 다른 정파성을 가진 진보 언론에서 해당 프레임을 3배 이상 더 활용하였다. 프레임3(탄핵소추로 이어진 성과 없는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은 포괄적 프레임으로 진보 언론이 조금 더 언급하였으나 앞선 프레임1과 프레임2에 비해 비교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4>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이 보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프레임1은 수사 초기에 정부의 부실대응과 무너진 보고체계가 드러나며 부각된 제도개선 프레임으로 국정조사 전에 주로 언급되었다. 프레임2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프레임으로 국정조사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빈도가 급감하여 국정조사 전 0.14, 국정조사 후 0.01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3은 포괄적 프레임이긴 하나 대부분의 주제진술문이 국정조사 이후에 나타난 이슈들이므로 국정조사 이후 0.11, 국정조사 이전 0.03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론 프레임 연구로 다음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귀납적 언론 프레임 연구이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말에 발생한 참사로 언론 프레임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을 거쳤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2023년 2월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게 되었음은 프레임3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의 전체 현황을 크게 조망할 수 있고, 복잡하고 정신없이 빠르게만 지나쳤던 당시의 이슈들이 프레임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군집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도출하여 적절한 군집수를 대략 정한 후, 해당 군집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cluster plot(군집구성) 그래프를 통해서 군집화가 잘 되었나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확인한 군집수 3개를 적용하여 다시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군집에 포함된 주제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셋째,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프레임 활용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기존 많은 연구에서 확인한 바 있는 언론사의 정파적 성격이 이번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서도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제도 개선 위주의 프레임(프레임1)을 주로 사용하고, 보수 정권과 여당에게 비판적인 프레임(프레임2, 프레임3)은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언론사의 정파성 연구의 실제 사례로 재난·참사 분야에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언론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보도는 아직 완전히 종결된 연구대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는 후속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고위공직자가 나타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피해자 유가족들의 요구였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부족하나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계속해서 이슈가 새롭게 나타나고, 며칠만에 기존 이슈가 덮여버리는 사안에 대하여 귀납적 연구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무수히 작은 이슈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도

출한 3가지 프레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고생한 용산소방서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책임 전가라며 반발한 것, ②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유가족협의회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막말한 것, ③ 참사 생존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당시에 크게 보도되며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이었다. 하지만 잠깐동안 이슈가 되고 지나간 기사들은 군집분석에서 빠지거나 주제진술문으로 채택되기 어려웠다. 군집화 되기 어렵거나 다른 중요한 주제진술문에 선택지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납적 연구방법이 아닌 사전에 프레임을 구분해서 설정하고 해당 되는 프레임에 맞는 기사를 수집하는 연역적 연구방법의 보완이 있어야 좀 더 완성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등이 내려져 어느 정도 후속조치까지 종결되면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보도 프레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귀납적 프레임 도출 방식에 연역적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이태원 참사’ 관련 이슈들이 최대한 버려지지 않고 보도 프레임에 포함되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언론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논문>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 이준웅 (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 이민규, 김수정 (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김성진, 박경우 (2009)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행태 연구: 송례문 화재사건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 김나영, 하상복, 손영우, 최종명, 고희대, 임양준 (2013) 모바일 투표에 대한 국내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 김승민 (2014)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론프레임 보도 분석.
- 우지숙, 최정민 (2015) 공기업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5개 일간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 최진봉 (2016)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지상파 3사와 JTBC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 김영욱, 함승경, 김영지 (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DA)과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합.
- 서은아, 김형주 (2017) 재난보도 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 연구.
- 홍주현, 김경희 (2017)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김경희 (2017) 지역의 재난 뉴스에서 나타난 보도관행과 대안: 세월호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기자들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 최민음, 정희수 (2018)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지카 바이러스 보도를 중심으로.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 한지원, 김영옥 (2021) 코로나19 한국대응관련 국내 진보-보수 언론의 외국보도 인용기사 비교: 한국의 이미지 및 정체성 중심 분석.
- 고동완, 이창현 (2022)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관련 신문 사설의 뉴스 프레임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 홍지현 (2022) 전기요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 이종혁 (2022)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북한 전문가 활용 방식의 차이 탐색: 인용문에 대한 KPF-BERT 기반 딥러닝 분석을 중심으로.

<단행본>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박영스토리
- 이동호, 김원용 (2005)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서울 : 삼성경제연구원.
- 정인숙 (2013)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옥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Abstract

A study of the types of framing in major media coverage of the 'Itaewon traged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ditorials in
major daily newspapers -

Nansaem Yi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ductively identify the framing of media editorials on the 'Itaewon tragedy' and analyze them by media outlet, media orientation, and before and after the national investigation. To this end, we collected editorials from six media outlets (Kyunghyang Shinmun, Hankyoreh,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and Hankook Ilbo) that were reported for about 100 days from October 29, 2022, when the Itaewon tragedy occurred, to February 9, 2023, when the impeachment charges against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min were voted on, to determine 144 editorials for the study, and derived 37 thematic statements by topic function. Based on thi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and as a result, three

clusters were derived, which were reorganized into a narrative structure to derive the final media frame.

Frame 1 is 'Urge to build a safety management manual to prevent accidents'.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safety of its citizens even when there is no organizer, so the content of this frame calls for a safety management manual or guidelines to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such accidents from happening again.

Frame 2 is the "Need for a national investigation and special prosecutor to find out the truth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frame. The government has tried to avoid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but it is argued that a national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clarify the truth and the ruling party should participate, and a special prosecutor should be considered to punish those responsible.

Frame 3 is the 'Unsuccessful investigations leading to impeachment, national investigation, and dismissal proposal' frame. The investigation into the disaster was stalled and ended with the 'exoneration of the top brass,' the national investigation, which began with difficulty, went round in circles and ended without results, and the proposal to dismiss was rejected by the president. In the end, this led to an unprecedented situation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peachment bill was passed again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Based on the above frames,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frames by media outlets, but all three fram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the significance level.

Then,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frames by media outlet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in

frame 1, conservative media outlets mentioned the frame twice as much as liberal media outlets. In frame 2, the liberal media, which has a different partisanship from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utilized the frame more than three times more. These results are analyzed to indicate the partisanship of the Korean media. Frame 3 is an inclusive frame and was mentioned slightly more by liberal media,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frames 1 and 2.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 in frames before and after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frame 1 was mainly mentioned before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frame that highlighted the government's poor response and broken reporting system at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Frame 2 is a frame that calls for a national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 and its frequency naturally decreased after the national investigation and was higher before the national investigation. Frame 3 is a comprehensive frame, but it appeared more frequently after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because most of the thematic statements were issues that emerged after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This study is an inductive media frame study on the 'Itaewon tragedy'. It can be used as a starting point for subsequent frame studies.

In addition, various methods were applied to conduct cluster analysis. First, we used hierarchical clustering to derive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s through dendrograms, then cluster plot analysis to check for good clustering, and finally K-means clustering analysis to confirm the topic statements included in the three clusters. This methodolog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future media frame studies.

keywords : Itaewon tragedy, media frame, inductive frame
analysis

Student Number : 2022-29042